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정책 방향*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1.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¹⁾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전략은 ‘창조경제’다. 새 정부가 제시한 이의 궁극적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국내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 창조경제 제시의 주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는 외환위기 직후 급락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970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기간별 고용탄성치를 보면 1970~83년 기간중 연평균 0.356(즉, 경제성장률 1%p 당 취업자수가 0.356%p 증가하는 의미)에서 1984~97년 기간에 0.350으로 소폭 하락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전후로 고용탄성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도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전 기간(1998~2008년)의 고용탄성치는 0.311²⁾로 직전 기간의 0.350에서 크게 하락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2009~12년)의 고용탄성치는 0.290으로 추가적으로 낮아졌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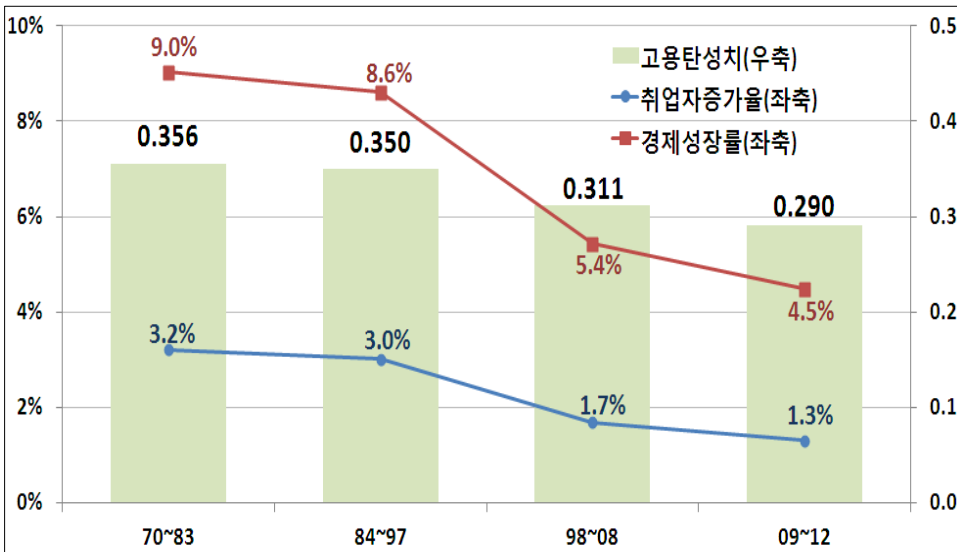
* 본 원고는 2013년도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개최된 정책세미나(2013. 4. 15.(월),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본 자료의 I. 일자리 창출력의 약화 II. 일자리 창출력 약화 배경은 주원·백다미(2012) “경제구조 혁신이 고용 창출의 근원”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pp.1-7.의 내용을 전재한 것임.

2) 참고로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전 기간을 2003년을 기준으로 다시 구분하였을 경우 '98~'02년의 고용탄성치는 0.352이며 '03~'08년은 0.300으로 후반기가 더 낮아지는 모습임.

3) 2012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은 IMF(2012년 4월) 전망치를 사용함.

<기간별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IMF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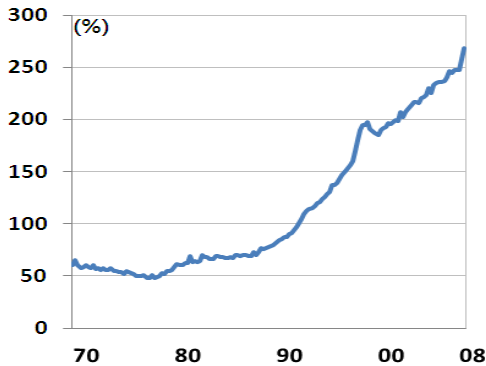
주: 1) 2012년 취업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IMF 전망치(WEO 2012. 4.)를 사용.

2) 취업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해당 기간의 연율 환산 증가율임.

2. 일자리 창출력 약화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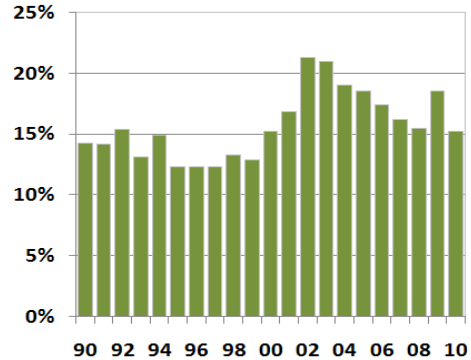
한국 경제의 급속한 고용창출력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는 ① 자본집약화에 따른 노동절약적 경제 시스템화, ② 글로벌 분업화 확산에 의한 일자리 해외 유출, ③ 대외 충격에 따른 고용손실의 복원력 미약, ④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 감소, ⑤ 고용 경직성에 따른 노동 이동성 미약 등을 들 수 있다. 고용 창출력 하락의 첫째 원인으로는 한국 경제의 자본집약화에 따른 노동절약적 경제시스템화를 지적할 수 있다. 어느 나라든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 진행된다면 자본 축적이 노동 투입보다 빠르게 늘어나 경제구조가 노동절약적으로 이행되기 마련이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자본 투입 증가로 발전 초기 노동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자본집약적 구조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고용 창출력이 축소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1990년대 이후 자본스톡/노동투입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외환위기 이후는 물론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생산능력확충 투자보다 공정자동화 등의 합리화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의 노동절약적 경제 시스템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합리화투자/총설비투자 비중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상승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크게 높아졌다.

<자본스톡/노동투입 비율>



자료: 안정화(2009),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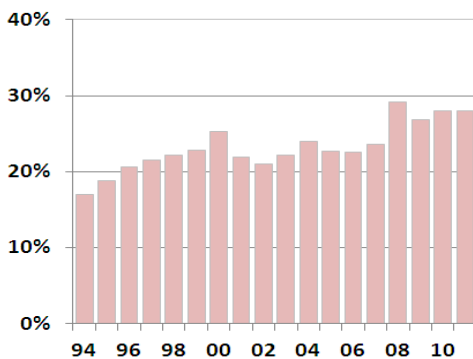
<합리화투자/설비투자 비중>



자료: 한국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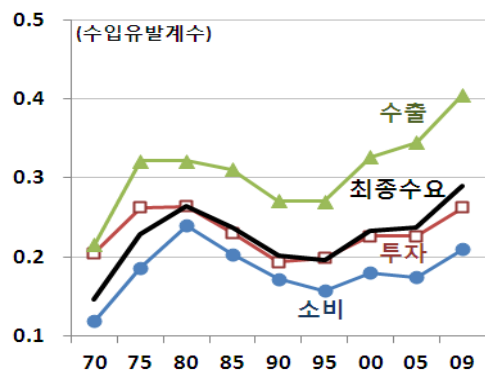
국내 산업의 글로벌 분업화 확산에 의한 일자리의 해외 유출 현상도 국내 경제의 고용 창출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투자 여건의 악화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고,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국내 시장의 개방화 확대 등으로 부품소재산업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산업의 수입유발효과가 상승하여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해외 유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미국, 유럽 등과의 거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수출 제품 생산구조의 복잡 다 기화, 원자재의 상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 산업의 국제 분업화(special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출 부문의 수입유발계수가 1995년 최종수요 한 단위당 0.271에서

<부품소재·자본재 수입/GDP 비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품소재통계시스템(PMSD) 및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최종수요별 수입유발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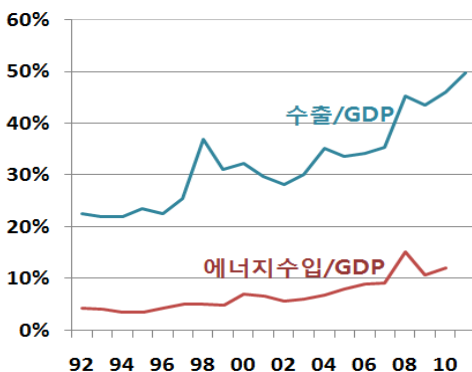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7부문으로 통합하여 계산.

4) 안정화(2009), “자본 축적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 자본스톡의 추계와 분석(1970-2008)”, 사회경제평론 제 32호 (2009년 상반기) pp.229-268.

2009년 0.406으로 급등했다. 경제 전체의 수입유발계수도 같은 기간 0.196에서 0.290으로 상승했다. 한국의 부품소재·자본재 수입/GDP 비율 역시 1994년 17.1%에서 2011년 28.0%로 큰 폭으로 올라갔다. 이는 최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을 할 때 이를 위한 중간재 수입이 계속 늘어나 그만큼 국내 경제 활동의 부가가치와 국내 고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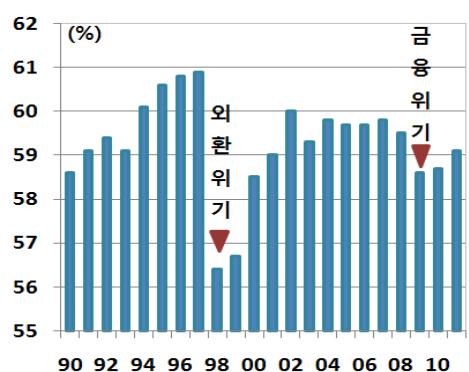
대외 충격에 따른 고용손실의 복원력 미약도 문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으로 대외 충격에 의한 영구적 고용 상실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경제위기와 같은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큰 경제 교란을 경험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의존도 및 에너지수입의존도로 말미암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불안, 에너지 가격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수출/GDP)는 1990년 24.1%에서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49.7%로 급증했고, 에너지수입의존도(에너지수입/GDP)도 1992년 4.3%에서 2010년 12.1%로 상승했다. 그 결과 경제적 교란 강도가 과도할 경우에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고용 시장으로 파급되어 영구적 손실(permanent loss)을 유발하게 된다. 한국의 고용률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경제 충격으로 고용 시장에 영구적 손실을 가져오는 이력현상(Hysteresis)⁵⁾이 발견된다. 국내 고용률은 90년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외환위기 당시 급락했고 이후 점차 상승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또 다시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90년대에 연평균 59.8%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59.2%로 낮아졌으며 금융위기 이후 58.9%로 다시 하락했다.

<수출의존도 및 에너지수입의존도>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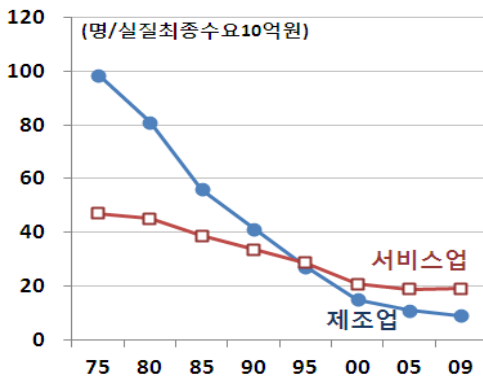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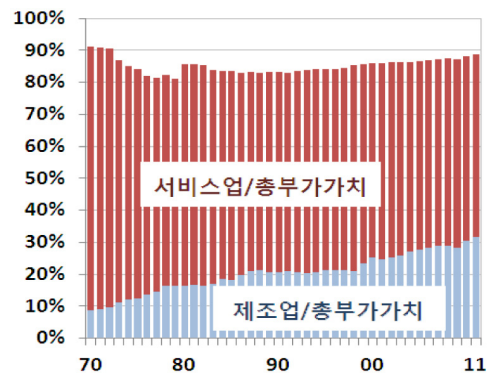
5) 관련 실증 연구로는 Papell et al(2000), Roed(2002), Feve et al(2003), 김웅(2009), Brandolini et al(2006), Gustavsson and Osterholm(2007), Blanchard(2003), Stockhammer and Sturm(2008) 등이 있음.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 감소도 고용 창출력 증가를 어렵게 하는 배경이다.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 비중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반면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실질취업유발계수⁶⁾ 값이 컸으나 1995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 값이 더 높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09년 현재 제조업의 실질취업유발계수는 8.9명/최종수요 10억 원으로 서비스업의 19.0명/최종수요 10억 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업부가가치/총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 82.6%에서 1990년 62.4%에 이어 2011년 57.2%로 감소했다.

<실질 제조/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



<실질 제조/총부가 및 서비스업/총부가 비중>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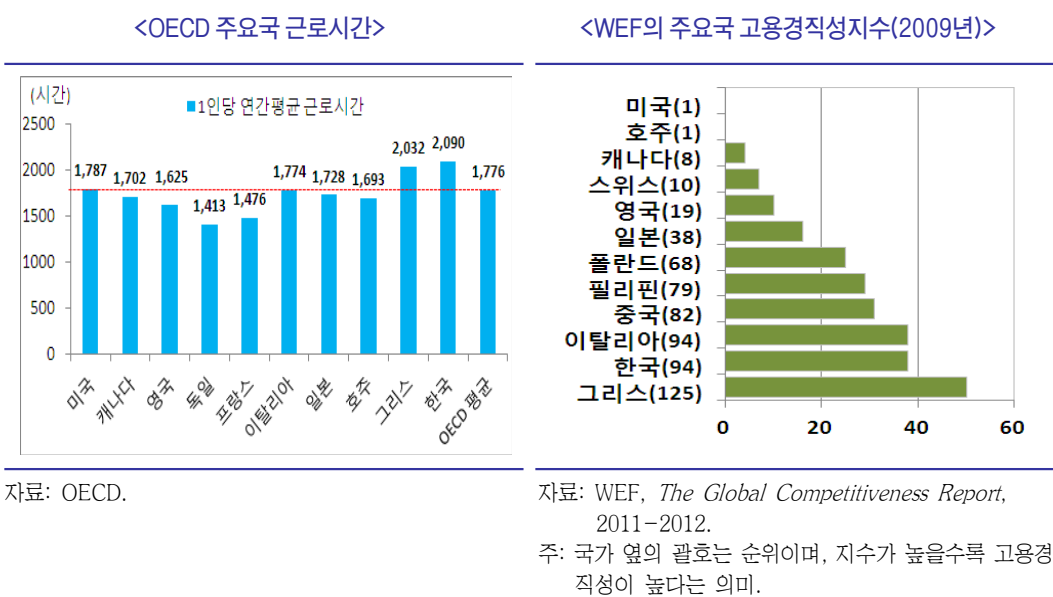
주: 취업유발계수의 행렬 계산은 7부문 통합 과정을 통해 도출된 명목최종수요 당 취업유발계수를 국민계정의 경제활동별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 최종수요 기준으로 전환.

고용 경직성에 따른 노동 이동성 미약도 국내 경제의 고용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다양한 요인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신규 진입, 직장·산업간 이직 등이 용이하지 않아 고용 흡수력의 불필요한 누수(漏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한국 경제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들 중 최고인 점이다. 또한 다양한 원인⁷⁾에 의한 노동 시장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고용흡수력의 확충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WEF에 따르면 2009년

6) 실질취업유발계수는 공식적인 개념이 아니며, 기존 취업유발계수가 명목 최종수요 기준이기 때문에 시계열상의 상대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연구원 자체에서 개념을 정의한 것임에 유의.

7) 이러한 원인으로는 재취업 교육 시스템의 부실, 내부자-외부자 모형[Insider-Outsider Model, Blanchard and Summers(1986)], 낙인효과[Stigma Effect, Ball(1999), Phelps(2008)] 등을 들 수 있음.

한국의 고용경직성지수는 38포인트로 고용유연성이 좋은 정도를 순서로 나열하였을 경우 세계 94위에 머물러 있다.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박근혜정부는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첫 번째 목표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새정부가 밝힌 창조경제는 협의의 특정 산업 육성에 국한된 것이기보다는 국내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광의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전략⁸⁾이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분 야	현 재	미 래
국정중심	국 가	국민 개개인
경제성장 모델	선진국 추격형	세계시장 선도형
	투입 중심 양적 성장 (경제성장률)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 (고용률)
	수출 · 제조업 · 대기업 중심 불균형 성장	내수 · 서비스업 · 중소기업 균형 성장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자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2013. 2.

8) 창조경제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유병규,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정부의 실현 전략”,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3월 25일에 상제 설명.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 전략과 과제>

6대 전략	41개 추진 과제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2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3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4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7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9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듯한 성장 도모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12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13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14	수산의 미래 산업화
	15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6	고령 친화산업 육성
	17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18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20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1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2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4.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24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25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29	소비자 권익보호
	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31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32	기업지배구조 개선
	3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35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36	부동산 시장 안정화
	37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38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41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자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2013. 2.

새 정부의 창조경제는 크게 성장 전략, 산업 정책, 시장 질서 등 세 가지의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성장 전략으로는 자본 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하여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산업 정책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업융합적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의 확산과 동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장 질서 측면에서는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추구를 천명하였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6가지 전략과 총 41개 과제를 제시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개 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8개 과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5개 과제,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4개 과제,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질서 확립 6개 과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8개 과제가 그것이다.(표<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 전략과 과제> 참조)

4. 평가와 일자리 창출 과제

새 정부는 임기 내 고용률을 70%로 올리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239만 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 5년간 평균 매년 4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MB 정부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2011~2020’에 따르면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4.1% 가정하 일자리는 매년 평균 23.5만개 창출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 기준으로 연간 48만개 일자리를 만들려면 매년 7~8%대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2012년 성장률이 2%였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성장률을 4배 정도 높여야 가능해진다는 뜻이 된다.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15~64세 생산인구추계(만명)	15~64세 목표고용률(%)	목표 신규 취업자수(만명)
2012	3,565.2	64.2	-
2013	3,580.8	65.2	45.8
2014	3,593.6	66.4	51.4
2015	3,605.0	67.6	50.8
2016	3,613.5	68.8	49.1
2017	3,611.4	70.0	41.9
5년합	+46.2	+5.8%p	+239.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추산.

결국 고용률 70%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성장을 제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 구조 개선 방안이

함께 구상되어야 한다. 국내 경제의 고용 창출력 약화 배경을 토대로 할 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창출,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내수 서비스업 육성 등의 성장 정책과 고용의 유연성 제고와 같은 고용 시스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밝힌 창조경제 비전과 전략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산업의 융합화와 이를 위한 생태계 조성 그리고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시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 과제가 산업별·현안별로 나열되어 있어 이의 체계적 실현 방안 도출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파악된다. 또한, 산업별·현안별 정부주도의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창조경제가 자생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근본적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구조 개선에 대한 방안 제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위한 산업 발전의 체계적 실현 방안 보완’,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과제 도출’ 등과 함께 ‘고용 구조 개선’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창조경제를 위한 산업 발전의 체계적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정보통신기술(ICT)이나 과학기술 혁신에서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별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초과학 → 응용과학 → 기술개발 → 기술응용 → 상업적 개발 →> 사업화 → 경영 → 성장이라는 사업의 전 주기적 차원의 각종 장애요인들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창조 순환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와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신산업 부문을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하는 측면에서 찾기보다는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창조’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창조는 이전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것으로 정의되지만 이는 과거의 수많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생성된다. 주어진 시간 안에 창조경제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개념과 투자 대상을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투자 대상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창조경제 성공의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정부 부처간 보완적 협력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창조경제 실현은 한 부처가 담당하기 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교육부 등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추고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창조경제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증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미래창조부는 창조경제의 씨앗(혁신기술)을 만들고 기획재정부는 밭을 갈며(제도혁신) 산업자원통상부는 결실(창업과 고용)을 맺는 역할을 하는 한편 교육부는 의욕(창조 정신)을 돋우는 일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창조경제 목표인 성장 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와 창업 여건 조성에 필요한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창업을 위한 창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창조경제 성공은 왕성한 창업을 위한 창조 시장 기능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무리 막대한 과학기술 투자를 하여 논문과 특허를 양산한다 해도 이것이 시장에서 실제로 산업화가 되고 수요를 만들어내기 전까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이는 별 효과가 없게 된다. 연

구개발을 통해 생성된 신기술들이 기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인수합병(M&A) 시장’과 이를 용인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조 금융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왕성한 창업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을 뒷받침해주고 투자를 하는 창조 금융의 역할이 막중하다.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에 기초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모험 자본’이나 ‘엔젤 투자’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금융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셋째,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창조경제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들의 창의력을 발현하는 창발성이 살아나지 않으면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가로막는 국내 경제사회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산업 성장력 제고 정책과 함께 한국 교육 및 고용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창의적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제도 개혁과 대학 운영 체제의 자율성 제고와 경쟁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 임금 조정, 정년과 고용 연장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관의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 용,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Working paper 제397호, 2009.
- 김창경, “창조경제에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과 전망,”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전과 과제』, KISDI, 2013.
- 댄 세노트 · 사울 싱어 저 윤종록 역, 『창업국가』, 다함미디어, 2010.
- 리우웨이 저 허유경 · 정승철 · 김재훈 역, 『창의로 중국경제를 바꾼다』, 논형, 2010.
- 안정화, “자본 축적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자본스톡의 추계와 분석(1970-2008),” 『사회경제평론』, 제32호, 2009, pp.229-268.
- 유병규, “창조경제의 의미와 재정부의 실현 전략,”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3월 25일.
- 이종원 · 유병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미래』, 해남, 1998.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2013년 2월.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 주 원 · 백다미, “경제구조 혁신이 고용 창출의 근원,”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2, pp.1-7.
- 최영락 · 임기철 · 유병규 외, 『창조적 혁신으로 새 성장판을 열자』, NAEK, 2013.
- Ball, L., “Aggregate Demand and Long-Run Unemploy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999, No. 2, 1999, pp.189-251.
- Blanchard, O. J., “Monetary Policy and Unemployment,” Remarks at Monetary Policy and the Labor Market, a Conference Held in November 2002 in Honor of James Tobin, 2003.
- Blanchard, O. J. and L. H. Summers, “Hysteresis and the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croeconomics*, Annual 1986, Vol. 1, 1986, pp.15-90.
- Brandolini, A., P. Cipollone and E. Viviano(2006), “Does the ILO Definition Capture All Unemployment?,”

-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4, Issue 1, pp.153–179.
- Fève, P., P. Y. Henin and P. Jolivaldt, “Testing for Hysteresis : Unemployment Persistence and Wage Adjustment,” *Empirical Economics*, Vol. 28, No. 3, 2003, pp.535–552.
- Gustavsson, M. and P. Osterholm, “Does Unemployment Hysteresis Equal Employment Hysteresis?,” *Economic Record*, Vol. 83, Issue 261, 2007, pp.159–173.
- IMF, *World Economic Outlook: Growth Resuming, Dangers Remain April 2012*, 2012.
- John Howkins,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in the UK*, NESTA, 2001.
- Papell, D. H., C. J. Murray and H. Ghiblawi, “The Structure of Unemploy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2, No. 2, 2000, pp.209–315.
- Phelps, E. S., “U. S. Monetary Policy and the Prospective Structural Slump,” 7th Annual BIS Conference on Monetary Policy, 2008.
- Philip, A. and I. B. F. Mariscal, “OECD Unemployment: Structural Breaks and Stationarity,” *Applied Economics*, Vol. 32, Issue 4, 2000, pp.399–403.
- Richard T. Gill, *Economic Development: Past and Present*, Prentice–Hall, 1963.
- Roed, K., “Unemployment Hysteresis and the Natural Rate of Vacancies,” *Empirical Economics*, Vol. 27, No. 4, 2002, pp.687–704.
- Stockhammer, E. and S. Sturm,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Unemployment Hysteresis,” *Applied Economics*, Vol. 44, Issue 21, 2008, pp.2743–2756.
- UNESCO, *Understanding Creative Industries: Cultural Statistics for Public–policy Making*, 2006.
- UNCTAD, *Creative Economy Report*, 2004, 2008, 2010.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 2011.
- 野村総合研究所, 平成23年度 知的財産権ワーキング・グループ等侵害対策強化事業 報告書(クリエイティブ産業に係る知的財産権等の侵害実態調査及び創作環境等の整備のための調査), 2012年 3月.